

#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본

## 한·독 관계

하르트무트 코석

독일 연방의회 의원

오랜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 독일 연방의회 독한의원 친선협회 회장으로서, 독한포럼 공동의장으로서, 독한 통일외교정책 자문위원회 전 공동 위원장으로서 오늘 “대화와 원칙- 독일의 경험과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대응방안”제목으로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와 평화문제연구소가 준비한 한독 워크숍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특히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이신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와 김영수 사무국장에게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해 노력해 오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스자이델재단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평화문제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공동행사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영석 이사장님과 평화문제연구소 측에도 우호적이고 신뢰감 있는 협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한스자이델재단과 평화문제연구소가 독일과 한국에서 개최하는 행사들과 만남의 자리에 참석해 왔습니다.

독일은 40년간 한국과 분단의 역사를 함께 해왔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혁명이 일어난 지 28년이 지나고 독일과 유럽은 분단을 극복하였지만 한국은 여전히 분단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동북아시아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독일과 유럽연합과 한국이 가지는 특수한 관계를 규정짓는 요소입니다.

통일을 이룬 독일은 과거의 분단과 통일의 기억으로 인해 남북한의 접근과정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은 자신의 분단상황을 1989년과 1990년에 평화롭게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합니다.

요아힘 가옥 전 독일 연방 대통령께서는 2015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두 나라는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 간에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가옥 대통령께서는 동시에, 독일의 분단 극복 경험이 결코 단순히 하나의 ‘청사진’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은 적어도 분단국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분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옥 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회 연설에서 남북한 간에 지속되고 있는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안보정책과 같은 까다로운 주제들뿐만 아니라 경제, 학술, 문화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들에 관한 대화는 의사소통의 경로를 여는데 도움이 되며, 신뢰와 대화는 평화로운 전환과 이해를 위한 열쇠입니다. 이 경우에 통일이라는 목표가 비록 멀게 느껴질지라도 항상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가옥 전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볼 때 가옥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은 더욱 그 의미를 새길만 합니다. 북한의 태도는 남북한 간 접근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필수적인 평화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북한이 보인 태도로 인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은 대 북한 유화정책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지금까지 시행한 것 중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제재를 가하는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높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식 결의문을 외교부 장관들이 10 월 16 일에 채택하였으며, 이에 앞서 메르켈 총리는 위기상황에 대한 외교적 해법의 적용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최근의 제재 결의를 통해 계속되는 북한 정권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메르켈 독일 연방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 연합의 제재 결정을 지지하며, 독일 연방정부는 또한 북한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모든 형태의 무력 사용을 ‘절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걸어온 선거 승리 축하 전화에서 메르켈 연방총리는 북한 사태에 대한 독일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다시금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을 비판하였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미국 대통령과 명백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연방 총리는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의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해당 정상들과 긴밀한 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메르켈 총리는 항상 대화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북한 사태와 관련하여 중재자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태의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독일과 유럽 연합이 2015년에 이란과 체결한 협약을 상기시켰습니다. 해당 협약은 결국은 이란의 핵 무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그마 가브리엘 독일 외교부 장관도 9월 21일에 행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모방자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러한 사례를 따르는 또 다른 정치지도자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사회가 함께 극복해야만 하는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입니다.

북한 권력자의 동기에 관해 묻는다면 북한의 권력자인 김정은은 현재 오직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동등한 입장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김정은은 현재 미국만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은 가장 최근의 핵실험을 브릭스 회의 개막일인 2017년 9월 3일에 함으로써 김정은이 중국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한 듯합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종종 과대평가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이전 소련과 주변 위성국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북한에 중국의 군대가 주둔해 있지 않으며 북한은 늘 자력갱생을 중시해 왔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게 하는 방법을 배운 듯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외교와 그에 따른 특정의 계획적인 태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김정은과 대화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9 월 30 일 베이징 방문 시에, 자신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고 다시금 분명히 밝힌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후에 미 국무부 관계자가 인정한 것처럼 아직까지 북한의 대화 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마치 미카도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먼저 움직이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움직여야 하며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동시에 압박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그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며, 한반도의 유사한 이전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가브리엘 외교부 장관의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 제재와 협상’ 시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김 정은과 대화를 시작하고 그것을 중재하는 것입니다. 이란과 시도했던 지난한 협상의 결과로 성공했던 것을 북한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1994 년에 이미 미국과 북한 간에 협정을 맺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에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예를 들면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 조직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2018년 2 월 9 일부터 25 일 사이에 한국의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도록 초청하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의 평화 이념이 계기가 되어 한반도의 갈등을 완화하는 평화와 대화의 길로 들어서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신뢰와 대화는 평화적 전환과 이해를 위한 열쇠이다.”라고 하는 가옥 전 대통령의 말씀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즉 그것은 북한 정권의 국제적인 고립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긴장완화를 위한 길을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일 정치권과 외교가, 독일 재계, 독일 정치재단들, 독일 문화원, 독일 학술교류처, 알렉산더 훔블트 재단과 아그로 액션, 독일 적십자사와 독일의 양대 교회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기관들 또한 앞으로 비인도적인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독일 통일 20 주년을 맞아서 독일 통일과정에 관한 정보들과 학술적인 지식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이를 한국의 통일정책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한독 양국의 전문가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대한민국 측의 요구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독일통일과 관련된 국가 문서들과 역사 문건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에 설치된 이 한독 자문가 위원회에 속한 대표적 인사들은 로타르 드 매지에르, 호르스트 텔糍, 라이너 에펠만 등입니다. 동독 노이에스 포룸과 1990년 동독 인민회의 슈타지 해체 특별관리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요아힘 가옥 전 대통령도 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이 위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4년 3월 독일 국빈 방문 시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독일은 남북한 간 접근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시 독일 외교부 장관이었으며 현재 연방 대통령이 되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박사와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한 통일외교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립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양해각서에 양국은 2014년 9월에 서명을 했으며, 정책 자문 위원회는 2014년 10월, 슈타인마이어 당시 외교부 장관의 대한민국 방한 시 서울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저를 독일 측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한국 측 공동 위원장은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맡았습니다. 양측에서 각각 7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대한민국 측의 요청에 따라 독일 통일 경험들 중 외교적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인접국들과의 상황에 적용 가능할지 추천을 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올해 4 월 28 일 독한 통일외교 정책 자문 위원회는 제 5 차 실무 회의를 베를린 독일 연방 외교부에서 가진 후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독일과 한국 양 측의 외교 전문가들이 지난 수년간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여 얻어진 결과물로서 양 측은 한반도를 위한 전략 마련에 있어서 매우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결의된 권고안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 **통일정책에서의 합의 및 일관성**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며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성을 담보한 채 이행이 되는 통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통일정책 기본헌장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한국의 통일을 위한 인접국가들의 지원 확보**

독일은 인접국들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역안보기조를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인접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현존하는 한미 간의 상호군사동맹을 지역안보기조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요 인접국들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율할 구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신뢰 구축**

유럽에서의 지역 협력과 통합이 독일 통일을 위한 유리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 정부는 기존 지역 협력에 관해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핵심적인 역할을 가진 한국의 다자간 기조 활용**

한국 정부는 한국의 통일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다자간 기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통일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할 때 한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통일한국 외교정책의 평화비전 선언**

독일은 유럽 평화에 대한 열의를 특히 2+4 조약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인접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을 명확히 밝히고 통일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평화비전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통일한국은 비핵화와 무기 감축 그리고 예를 들면 유엔의 틀 안에서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북한 인권 개선, 국제 사법권 확보 및 탈북민들의 완전한 한국 정착 지원**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은 명백하게 북한 정권과 구별해야만 한다.

한독 양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기록이나, 특히 위반사항들 그리고 관련된 정치인들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활용방안 관련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한독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한국 내 정착을 위한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는 인도적인 이유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을 위한 사전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 통일 문제에 관한 독한 자문 위원회의 활동 지속

자문그룹은 지난 3년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독일의 통일 경험을 전달했다. 따라서 한독 양국 정부는 시급히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자문체계를 마련하여 자문그룹의 업무를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국의 외교부 장관들은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문그룹은 이미 강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독 양국이 이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 생각에 독한 통일외교 정책 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며 통일을 목표로 한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한 이정표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좋은 해답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간의 재접근을 위한 전제는 지역 환경과 국제적 환경의 긍정적인 전개입니다. 독일의 유럽 내 동반자들과 미국 그리고 대 독일 정책의 전환을 주도했던 고르바초프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독일통일과정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해서는,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감안하면, 의무적으로라도 유엔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지역 핵심국들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제재 이후 첫 번째 수순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게 됩니다. 핵 야망을 종식시킨 이란과의 지난 협상들은 올바른 시도였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도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의지가 혼합되어 결국에는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유럽과 독일이 협상에 관여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저는 유럽연합과 같이 해당 지역의 이해갈등 당사자가 아닌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해당지역에서 유럽연합으로서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으로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란 협상 때에도 이란, 반대 측 이해 당사자들, 유럽연합과 독일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좋은 시도였습니다.

목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이 핵 상황을 동결시키고 다음 단계에서는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목표하는 바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발전과 모든 관계 당사국들의 이해와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및 인도적 분야 등에서의 광범위한 협력을 포괄하는 모든 주제들에 관해 참여 국가들 간의 지속 가능한 대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남북한 간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은 이와 관련하여 동서독 간 접근과정의 경험과 내독간 관계와 연관이 있는 유럽 및 국제 상황의 측면을 통일을 위해서 독일이 걸었던 길을 모범사례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전달할 것입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재개되어서 핵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동북아시아판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프로세스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동서적대관계의 극복과 관련된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체제의 운영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독한 통일외교 정책자문위원회가 권고안으로 포함시킨 내용기도 한 국제안보체제와 안보 보장은 결국에는 유럽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유럽과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게 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협력을 위한 근간이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이미 2002년에 의회 내의 모든 교섭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안보협력회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은 앞날이 불투명하고 위험한 긴장 국면 속에서

어떻게 운신해야 하는지 아픈 역사를부터 배웠다. 우리 대륙은 긴장완화정책 및 냉전 극복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안보협력회의 프로세스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았다. 한반도의 현 긴장상황을 차단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으로는 단지 1 차원적인 핵 문제 해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신뢰구축과 군비 관리, 경제 및 에너지 문제, 사회적 전환, 인권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대화와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과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양측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해 당사국들인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과 유엔 사무총장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국 또는 미국과의 양자관계에서 지금처럼 무책임한 협박정책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는 형태가 아닌 다차원의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처한 위험한 국제적 고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차원 안보 프로세스는 곧 국제 안보 발의 차원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발의는 유럽연합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지난 시간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지 못한 외교 및 안보정치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책임을 떠안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은 유럽연합의 틀 내에서 이러한 발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극심한 제재라는 형태의 일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명백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84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2013년에 이미 밝히기를,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 대륙의 역사를 통해, 독일 분단의 평화로운 극복과 유럽 통합과정을 위한 핵심은, 대화와 신뢰구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한 간 대화를 이어가고 신뢰 구축을 위해 가능한 대화 통로를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에는 중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중국을 통하여나 다자간 차원에서) 지역 안보 보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제에 관한 새로운 협상에 북한이 응할 의사가 있는지 중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은 동북아시아에서 어떠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예전 동독에서 수학한 관계로 이들에게 독일은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독일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재단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맺어온 북한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단기적인 시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럽연합과 독일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안보회의 형태로 6자 회담을 확대하는 것을 시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회의를 통해 – 해결되지 않은 핵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 양자간 또는 지역에서의 신뢰 구축과 군비 제한 의제를 다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기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자 회담의 재개와 그에 따른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프로세스가 생겨난다면, 제 생각에 이는 통일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독일이 통일 이후와 부분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언급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현실적인 측면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1989년과 1990년의

독일 상황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누군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면서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마주했던 경제적 도전과제들을 언급하려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독일은 이 막대한 과제들을 대부분 잘 해결했습니다.” 오늘날의 통일 독일은 경제적으로 1990년 이전의 동서독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해 졌습니다.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는 동시에 분단비용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자 상이한 경제체제로 운영되던 두 개가 합해졌을 때 양측은 제한을 감수하고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분단은 나눔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통일을 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국민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분단 또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비라든지 접경지역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 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독일도 분단 시절에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분단으로 인한 비용은 통일 한국에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보다 확실하게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은 통일 재건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기본 투자(예를 들면 기간시설 투자, 설비 투자 등)를 많이 한 결과 – 경제 및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 대비 2 배 이상 미래 투자를 하였음 – 유럽에서 금융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동서독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현재까지 인적 교류나 통신 또는 정보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통일이나 헬무트 콜 총리의 10 개 조항은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으로 제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남북한 건

접근이 자리를 잡는다면 헬무트 콜 총리의 10 개 조항과 모드로 동독 총리의 3 단계 계획을 조합하여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구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안 1 – 인도주의 성격의 신속대응 방안

헬무트 콜 총리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남쪽을 왕래할 개연성이 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는 이전 동서독 간의 그것보다 크다. 통제가 없는 경계의 개방은 남쪽을 향한 대규모 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 남쪽의 경제력에는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것이며, 남한 사회에서는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는 통일을 거부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산가족 만남이나 일정 연간 방문 인원수와 남측 체류기간을 정해놓고 북한 측 방문자를 받는 방법이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대규모 이동을,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남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통일당 수뇌부가 왜 1961년에 결국 베를린 장벽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말자.

### 방안 2 – 포괄적 경제지원

헬무트 콜 총리의 10 개 조항 계획에 포함되어 있듯이 남측은 두 번째 단계에서 북한과 경제, 학술-기술, 문화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개성공업지역 외에 여러 군데에 경제특구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이는 남북한 간의 접경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륙지역에 이르기까지 북한 전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북한의 경제가

남측의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이며 시장경제구조가 단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상술한 배경에서 노하우의 전수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혹시 일어날 수 있는 통일을 대비하여 경제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양질의 사전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남북한 간 대학들의 협력관계가 필자의 생각에는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다. 통제는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의 대학생 교류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남측은 북한 대학생들에 지원을 해야만 한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자금대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대출 학자금의 변제는 통일 이후에 하도록 한다. 남북 대학생들은 각각 출신지역으로 돌아간 뒤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인력들로 지속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며 통일 이전에 상대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분단 이전의 한국을 경험했던 세대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감안할 때 통일 정신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잊지 않게 유지하며, 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들과 초중고, 대학교 및 역사가와 문화 종사자들의 책무일 것이다.

### 방안 3 – 남북 양측의 협력 확대

헬무트 콜 총리의 10 개 조항 계획에 따르면 동독의 정치 및 경제 체제에 근본적인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력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통일당이 가지는 통치권의 철폐, 자유, 비밀선거의 도입, 정치적 반대 세력의 인정, 정치 형법의 폐지, 정치범 석방 그리고 관료적 계획경제의 철폐를 의미하였다.

구 동독에서의 정치 체제 전환은 구 동독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다. 수많은 구 동독 주민들이 자유와 권리 그리고 통일을 위해 시위를

하였으며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은 그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북한에서 발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당이나 관청 또는 군대에서 근무하는 많은 수의 체제 유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유념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며, 전체 평화과정을 방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 다 할 것이다.

‘요구와 지원’ 원칙은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요구’ 원칙은 우선 북한 인권의 엄격한 준수, 경제, 학술 및 기술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의 건설적인 협력,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서약 그리고 군사시설 조사 가능성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원칙은 이와는 달리 삶의 질 향상이나 경제체제를 서방의 기준에 맞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층이나 군인들도 통일된 한국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며 이 사람들이 점차 북한 정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지배계층과 군대는 독일 통일 당시에 동독의 지배계층에 대한 복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횡적인 형태의 사법처리가 없었고, 두 개의 고도로 무장한 군대가 평화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주의 깊게 고찰한 바 있다. 한국은 한국 통일의 경우에도 독일의 사례가 참고할 만 하다는 명확한 메세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안 4 – 계약사회

헬무트 콜 총리의 10 개 조항 중 4 번째 조항은, 필자의 생각에는, 한국의 상황에도 부합하는 듯 하다. 무엇보다 계약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합의가 촘촘하게 얹혀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공동의 제도를 일컫는다.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설립된 위원회들은 경제, 교통, 환경보호, 학술, 기술, 보건, 문화 분야 등에서 새로운 과제들을 맡게 된다.

#### 방안 5 – 연합 형태 구성

헬무트 콜 총리의 10 개 조항 계획 중 다섯 번째 조항은 독일에서 연방 국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연합 형태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헬무트 콜 총리는 이러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로는 주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 정부였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헬무트 콜 총리의 10 개 조항 계획이 수립되던 시점에는 이미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의 수명이 오래 전부터 그 끝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동독은 북한의 김씨 정권 우상화의 사례와는 달리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의 최고 권력자 1인을 승배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며 인적 교류와 경제, 학술-기술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장하면서 계약사회의 체계 안에서 대화에 입각한 평화 공존을 고수하기 위한 대가를 지키려면 한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틀에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헬무트 콜 총리가 10 개 조항 계획에서 예정했던 바와 같이, 상시 자문 및 정치적 조정작업을 위한 완전한 공동 정부 위원회와 공동 전문 위원회 그리고 공동 의회 위원회 정도일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안보협력회의 프로세스와 함께 대화에 기반을 둔 계약사회가, 마치 구 소련의 미하엘 고르바초프가 촉발시킨 것과 같은, 전환과정을 위한 문을 북한에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북한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소리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계층과 군대가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며 - 구 동독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 북한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실현되면 연합 형태의 구성을 위한 길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의 몰락과 베를린 장벽 붕괴 그리고 구 동독에서 실시되었던 자유민주선거 이후에 독일 통일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것과 같이 한반도 통일이 빨리 진행되기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남북한 간에는 경제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구 동독의 모드로 총리의 계획으로부터 첫 번째 단계에서 연합 요소와 경제 및 화폐 통합 그리고 교통 통합을 위한 계약사회 부분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 양 측이 공동 조직과 제도, 예를 들면 의회 위원회와 주 심의회 그리고 행정부를 함께 구성하여 연합 형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의회와 정부를 함께 구성하여 연방의 형태를 띠는 하나의 한국이 만들어 집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의 통일은, 독일 통일이 2+4 조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안보협력회의 프로세스’의 틀 내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2015년 2월에 개최되었던 독한 통일외교정책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독일 측은 독일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독일 통일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이니셔티브’와 같은 구상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독일 측은 2+4 조약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독일은 통일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강대국들의 이해와 지원을 구하기 위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 개국들과 선제적으로 협상을 벌였던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안보협력회의 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2+4 조약을 통해 참여 당사국들의 지정학적 안보 측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비핵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주한미군 주둔 및 동맹관계의 문제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한국 통일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들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함께 1990년 11월 21일에 32개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가 모여서 개최했던 유럽안보협력회의 특별정상회의의 최종 문서로 서명했던 ‘파리 협장’의 선례에 비추어 ‘개성 협장’ 서명을 위한 준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옛 고려의 수도였으며 한국 분단의 상징이기도 한 개성은 뜻깊은 문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한 최적의 장소일 것입니다.

‘파리 협장’과 같이 그런 종류의 중요한 국제 협약은 한국 통일 이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파리 협장’을 통해 참여한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은 유럽의 분단이 종식되었으며 자국 국민들에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선언한 것입니다. ‘파리 협장’은 유럽 냉전과 분단의 종식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가옥 전 독일 연방 대통령께서는 2013년 6월 21일 고슬라 시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연설을 마무리하셨으며, 아래에 인용합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전망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 마치 환영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면 안됩니다. 25년 전 유럽의 한 복판에서 소련의 권력이 붕괴할 것 같았을 때 그것은 마치 환영과 같았지만 그것은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과거에 예상치 못했던 반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온 마음을 담아 인내와 확신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강력한 체제를 안으로부터 바꾸려고 하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희망은 우리 모두를 움직이게 합니다. 한국과 같이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고유 문화와 자존감을 지켜 왔기에 마찬가지로 통일도 이루어 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독일 연방의회를 떠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독한 의원친선협회장 직도 당연히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독 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목표로 한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2년에 외교적 노력에 대한 공로의 표시로 1급 공로훈장인 ‘광화장’을 받았고 작년에는 국제 교류재단에서 주시는 ‘코리아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큰 영광인 동시에 격려이며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독일 통일의 격정적이고 행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 연합이 한반도의 평화 및 화해 그리고 자유통일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재단에서 주신 상금 10,000 달러를 제가 만들고자 하는 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목적은 분단되어 있는 한국과 동북아 지역에서 신뢰 구축과 화해 그리고 인적 화합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시범적인 프로젝트들을 독일 측에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평화롭고 화해의 분위기가 정착된 동북아시아에서 통일한국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이름은 ‘하나의 코리아 재단 – 신뢰, 화해, 화합’입니다.

설립 예정인 ‘하나의 코리아 재단 – 신뢰, 화해, 화합’의 자산을 모으기 위해 동일한 이름의 신탁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필요한 재단의 자본금이 모이면 조합은 ‘하나의 코리아 재단 – 신뢰, 화해, 화합’으로 전환되며 모금된 자산은 재단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설립 예정인 재단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대화영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가옥 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이루고 난 후 새로운 역할이 생기면서 유럽에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책임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희의 책임은 한국이 가는 길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경험을 이야기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